

홍남기 “최저임금·52시간 속도조절…창업시장 너무 한산”

미래경제포럼 특별강연 “국제사회가 택한 포용 성장” “혁신성장 민간이 하는것…규제개혁·창업지원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사회안전망 확대와 저소득층 소득보장 등 속도를 낼 부분은 내이지만,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처럼 기업에 부담이 너무 가파른 부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6월 조찬 모임에 참석해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 할 6가지의 길’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치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적 포용성장’을 소개하며 “사회안전망 확대와 5대 생계비 절감, 저소득층 소득보장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포용성장의 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난 2~3년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다”며 “(그 때문에) 포용성장에 부정적 인식이 많이 박혔다. 하지만 포용성장은 우리나라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아주 폭넓게 논의되고 채택 중인 성장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성장은) 고용시장에서 벗어난 사람을 시장으로 끌어 들여 소득을 내게 하는 것, 고용시장에서 지나치게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같이 보듬어 나가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간의 압축성장이 아닌 혁신적 포용성장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실제 혁신성장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정부는 제도·법·규제·금융·R&D(연구개발) 등에 집중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과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산업혁명 당시 대표 규제 법률이었던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예시로 들며, 규제 법률이 있었던 영국과 달리 독일 등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에 2개 전쟁터가 있다면 취업 전쟁터와 창업 전쟁터인데, (취업 전쟁터와 다르게) 창업 전쟁터는 너무 한산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학생 700만명 중 8%가 창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50만명 중 0.8%만 창업에 나선다”며 “창업과 관련한 한중을 비교해 보면 10년 뒤가 걱정된다. 창업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분야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의 길을 닦기 위해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고(표준화), 그 규칙을 경제 주체들이 잘 지키는지 감시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룰(규칙)을 세팅(안착)하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정책과 행정의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면 사회 전반의 비용이 줄어든다. 보이지 않는 미국의 경쟁력 중 하나가 예측가능성이다. 이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는 규칙의 ‘선점’ 또한 중요해진다고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표준화가 중요하다”며 “옛날에는 먼저 선점하는 자가 더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형태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승자독식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K-방역도 우리 정부가 했던 3가지 부문을 모뎀화해 세계 표준화로 등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홍 부총리는 R&D와 창업 지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R&D 투자 규모와 관련한 참석자 질문에 “정부·민간 합계 R&D 규모는 나라 경제규모 비중으로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이 세계 1위”라며 “국가예산 512조 중 24조가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 34조, 44조, 54조원까지 가야겠다”며 “중소기업 R&D와 벤처·창업 지원은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제와 관련해서 연말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탈세계화가 이어질 것인 지적이 많지만 비대면·온라인과 추세를 고려한다면 세계화는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코로나로 주춤하는 이양상 있지만 세계화의 도드란 흐름은 계속될 것”이

라며 “다만 글로벌밸류체인(GVC)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는 포스트 코로나 과제의 중심이다. 연말 정도 되면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경우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 성과가 나오겠다는 얘기도 있다”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 되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국민에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200조원을 나눠줘서 우리 아이들이 부

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체계에 얽어서 기본소득을 할 상황은 안된다. 지금 복지체계를 어떻게 리셔플링(Reshuffling·재편) 할 것인지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며 “스위스에서 얼마전에 국민투표에 부쳤다. 기존 복지체계 리셔플링하겠다는 걸 같이 붙여서 투표에 올렸다. 리셔플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다”며 “그 돈을 다 없애고 전국민 뺄개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농어촌공, 전남 신북 등 물 부족 4개지구 수계연결사업

상습가뭄 6365ha 물 문제 해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연결하는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에 전남 신북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가 농식품부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상습가뭄에 시달리던 6365ha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17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신규지구는 신북지구와 충남 반산지구, 전북 고창북부지구, 경남 하남지구 등 4곳이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기존에

지구단위로 이뤄지던 급수체계를 수계단위 용수구역 단위로 급수지역을 통합해 용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용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연결 수로를 설치해 용수를 공급하고, 자체 용수확보가 어려운 곳은 단순 이용 후 흘려버리는 물을 다시 끌어올리거나 물이 빠져나가는 출구에 반박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미 개발된 수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저수지를 새로 만드는 방식의 용수개발사업비에 비해 40%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어 항구적인 거름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2018년 경기도 아산·금광·마두지와 충청남도 아산·삼교·대호호를 있는

것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증청부와 충청남도 아산북부, 전라남도 금호호·근대호 등 전국 9개 지구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2019년까지 3개 지구를 준공했고 2020년에 아산·삼교·대호호지구, 2021년에는 아산·금광·마두지지구를 순차로 준공하고 가뭄 극심 지역 수계연계 추진을 가속화해 물 자원 활용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인식 사장은 “기존 시설물을 보강하고 수리시설을 통합해 재편하는 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공급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30%로 상향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구역부터 적용 예정 재개정 가능성도…홍준표, 첫 발의 법안으로 도정법

정부의 집값안정 추가대책이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향선이 상향된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높아질수록 임대주택의 공급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들쭉이는 재개발 시장에 규제책의 일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 5% 포인트(p)였던 지역의 특성에 따른 추가 비율 지정을 10%p까지 상향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사업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상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결과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상승하는 셈이다.

또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의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의 경우 서울 5%, 경기·인천 2.5%, 기타 지역 0%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이 정비사업 추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구역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60% “코로나19로 애사심 높아져”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직장인들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은 직장인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57.6%)은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커졌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42.4%였다.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커진 이유로는 '현 상황에 퇴사하면 이직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57.1%)이 가장 컸다. 이어 '위기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연봉 및 복지'(25.6%) '직인 안정을 위해 재택근무 진행'(11.5%)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제공'(5.8%) 등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감염 예방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부재'(42.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국민 공청회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시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웨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 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총 22종의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제도의 현황과 해외의 사례 등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 중이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임금체불 사업주에

7천만원 용자...이자율 1%p ↓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사업주 용자 금리가 한시적으로 1%p 인하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사업 이율이 6월18일~7월30일 담보와 신용 모두에서 1%p씩 낮아진다. 이로써 담보 2.2%, 신용 3.7%였던 이자율은 각각 1.2%, 2.7%가 된다.

금리 인하 혜택은 기업은행에서 용자금을 수령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체불청산지원 용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을 지원, 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지방 고용노동 관서로부터 용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용자를 신청하면 된다.